건설업 양극화 고착 우려… 동반 성장 정책 지원 절실

- 공사물량급감 · 수익성악화일로 · 과당경쟁극심화등복합적원인작용 -

심화되는 양극화

요즈음최고의화두는역시양극화다. 경제 · 사회 각 분야에서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는 물론 바람직한현상이 아니다. 수도권과비수도권, 수출과내수, 대기업과중소기업 간 경기,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상치 않다고한다. 세계는지금 국제화와개방화로경제적국경을허물고 무한경쟁을벌이고있다. 그결과경쟁에서1등을하는자가과실을국제적으로독점하는경향은심화될 수밖에없다. 특히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아적극적으로국제화와개방화를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국제 사회의 이러한조류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은필연적이다. 국내적으로도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산업구조가고도화되며인력도 전문직과 비전문직 간 차별성이 커지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요인이되고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는 선진국으로도약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거쳐반드시극복해야만할과제일것이다. 정부도 양극화의심각성을느끼고그해법찾기에정책역량을집중할태세다.

건설업 양극화는 고착화 가능성마저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양극화의 그림자가 깊게드리워져있다. 작년도 중소기업들의주된시장인공공공사에서업체당 평균수주액이7억원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태에서업체를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도는 이미 오래 전에 한계점을 넘었다면서 당장 사업을 집어치우고 싶다는 어느 중소 건설업체 사장의말이결코 지나친말이아닌것으로 보인다. 더욱심각한것은최근건설경기의 양극화추세가구조적으로고착화될가능성 마저있다고보이는점이다.

대중소 기업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

중소기업이라고해서반드시 보호받아야 할이유는 없다. 하지만중소기업은산업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토대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의생존기반이취약해지는것은당연하다. 중소기업이 대형 기업과 함께 균형적으로 성장발전해야건설산업의체질이건강해지고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다. 이는건설업의국제경쟁력과직결된문제다. 따라서능력있는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것은국가적으로중요한핵심적인 과제다. 시장 원리대로적자생존의법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대책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보호와지원중심의 일방적인정책역시적절한대책은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과자생력을 약화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적조화가필요하다. 문제는그해법이무엇이냐일것이다. 이를찾으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복합적처방이있어야한다.

8 · 31 대책으로물량 대폭 감소

먼저건설물량측면을보자. 건설경기가 어려운것은정부의부동산안정대책에따른 영향이주요요인중하나다. 국내건설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8 · 31 대책으로된서리를 맞았다. 역시 국내 건설시장의 1/3을차지하는정부재정투자건설사업을 보자. 건설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상 아무리 어려움이있어도이는늘려나가야한다. 그렇지만 노동 · 복지와 국방 예산 증가 소요에밀려앞으로건설투자예산이늘기는어려울전망이다. 게다가정부가학교등소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발주하던 공사마저 BTL 방식의민간투자사업으로대폭전환 추진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자 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기반이 대폭좁아지고있는 실정이다. 나머지1/3은순수한민간건설부문인데이는국가경제의전반적인경기 상황과연결되어있는부문으로단시일내에경기가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종합해보면그어느 부문도단기간내에개선되기 어려운문제라는데그심각성이있다.

분양가공개 · 최저가등으로수익성악화

다음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업 경영

환경을보자.

주택부문은원가연동제및분양원가공개, 정부재정투자사업은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의대폭확대와민간투자사업의수익성 검증 체계 강화 및 하향을 위한 정책 강화, 그 외에도 개발 부담금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금의 강화로 수익성 역시 악화될전망이다.

무자격 업체 난립, 극심한 과당 경쟁

마지막으로업계내부를보자. 한마디로 건설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업체는 너무 많다. 일반건설업체만보아도 지난 10여 년 간계속 늘어 현재 1만 3,000여 개 사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체가많아진것은수익성이 있으면서 요행성이 일부 내재한 적격심사낙찰제도 한몫 했지만 그간 정부가 건설업등록기준완화를통해시장진입문턱을 너무낮춘것이근본원인이다. 어느새페이퍼컴퍼니같은무자격업체가적지않게자리잡게 되었다. 그럼에도정부의무자격 업체에대한감리감독시스템및퇴출조치는 미흡했다. 결국 건설시장은 흡사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상황과다를바없게되었다. 늘어난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들로 극심한 과당 경쟁으로경영여건은날로악화되고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키워야

차제에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직시하고 실천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의 보호 육성 정책에만 의존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이다. 정부는앞으로최대의경제적효율을 도모하는 건설 투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본다. 정부의 입장에서시급한재정수요는많고 재원은부족한상황에서 물량과 수익성에 있어 건설업체 입장을 배려하는온정적인정책을펼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한관점에서정부재정사업으로 집행되는공공건설부문의시장여건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아야한다.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적극적인정책개선노력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건설업의 양극화 요인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들을 고르게 육성 발전시켜 건설업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는 실로 건설업의미래가걸린중요한명제가아닐수없다.

대중소 동반 성장 정책 필요

제도와 정책적 수단을 통해 건설업의 양극화요인을해소하고대 · 중 · 소기업들을 고르게 육성 발전시켜 건설업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는 실로 건설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명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방향은 대 · 중 · 소 기업이 각각 나아갈 정책 방향과역할을제시하고, 잘나가는대형기업은 더잘나가도록앞길을열어주고난립된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구조조정되어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제도의틀을개선해나가는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형 기업은 종합관리업체로서 대형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시장에서 외국업체와 당당히 경쟁하는 면모를 구축할 수 있게 공사 발주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야한다. 중견기업은프로젝트관리능력과 시공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공사와 특화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고이를토대로대형기업과협력및경쟁을 통해 산업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터전이마련되도록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은특정분야에시공전문업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로서의 특성과 장점을살릴수있는중소규모지역공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특화 · 전문 분야 시공 기술을바탕으로대형기업과협업 관계형성을통해상생관계를구축토록지원해야할 것이다.

위와같이대 · 중 · 소기업간역할분담을촉진하고 동반성장을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첫째 겸업 제한 폐지 등 업역 체계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시공업체와 대형 기업 간협업관계형성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 관리 · 감독방법개선및낙찰자결정시무자격 업체 여부 확인 강화 등 부실 업체 퇴출 시스템을 통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조성해야한다. 셋째중소기업의존립 기반이 되며 건설업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기능을하고있는지역제한, 지역공동도급제도등현행중소기업지원제도를계속 시행하면서우수한중소기업을선별하는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ykbaek@cerik.re.kr